

## 지역발전특별법 '5+2 계획' 근간으로 추진

# '호남 위기' 가시화

“정치권·지자체 법안 수정 총력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할 지역발전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호남의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발전특별법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5+2 광역경제권'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대폭적인 내용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전부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달 내에 법제처 심

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발전특별법의 목적과 정의에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적시돼 있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특히 지역발전특별법은 입법 취지에 "광역경제권 수립을 위한 계획체계를 보완한다"고 밝히, 낙후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보다는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일방적인 지역 발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영남이 2개의 경제권으로, 호남은 1개의 경제권으로 나뉘는 등 호남의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역경제권 선

사업의 경우 호남은 5개에 불과한 반면 영남은 10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발전특별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양분한다는 방침이어서 호남권에 배정되는 국고 예산은 줄어드는데 반해 영남권에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낙후지역을 성장 촉진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변경했으나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 전국 70%의 도서를 잠하고 있는 전남에 대한 예산지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5일 지역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광역경제권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 외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쌀값 보장하라”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20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와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는 바 야적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 쌀 직불금 부정 농장 조사

광주·전남 시군구, 지난 2월 자료 받고도 미적 미적

500만원 이상 수령 1,859명...전수 조사 착수

광주와 전남도, 일선 시·군·구가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쌀 소득 직불제 법령위반 의심 사례' 자료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쌀 직불금 파문이 커져 자 뒤늦게 조사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3·4·5·11면>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시는 5천319건, 751ha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의심 목록을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17만612건, 2만2천155ha에 이른다.  
광주·전남도는 이 목록을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에 보내 올 연말까

지 조치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시·군·구의 업무 지시를 받은 읍·면·동은 쌀직불금 전담 직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사례가 총 17만5천931건에 이르고 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는 각각 339건, 665건 등 1천4건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해 광주·전남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직불금 수령자가 광주 20명, 전남 1천839명 등 1천859명에 달하고, 이 중 180명은 1천만원 이상

수급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부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해 전수 조사를 들어갔다. 시·도는 우선 기관 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부터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 특별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쌀 직불금에 대한 부당 사례를 추적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이 1명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조사는 물론 10%도 조사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채희중·윤영기기자 chae@

도청 앞 벼 야적 시위  
광주·전남 농민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광주·전남농민회)은 20일 오전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와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올해 첫 벼 야적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농민회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 각 200~300포대(1포대 40kg)씩 모두 벼 1천400여 포대를 싣고 도청 앞 광장에 야적했다. 야적 시위에 참가한 곳은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등이며 다른 지역은 현지 시·군청사 앞에서 야적시위를 벌였다.  
농민회는 이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고 쌀값은 조곡의 경우 40kg들이 1포대에 7만원, 정곡은 80kg 1포대에 20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해 이를 명문 화할 것과 매년 200억원의 비료 값 인상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농민회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28일에는 시·군별로 야적시위를, 다음 달 10일에는 대규모 2차 벼 야적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社告

#### 제36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국악인 강선숙씨 '우리 소리를 통한 여성...'

2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2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36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극배우이자



강선숙입니다. 지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우리 소리를 통한 여성경제인의 삶의 지혜와 행복
- 강사 : 강선숙(국악인·연극배우)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리구 5층  
062-271-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271-1111

### 여야 '쌀 직불금 國調' 조속 실시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는 20일 쌀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또 1천억달러 한도 내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3년간 지급보증을 끝

로 하는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과 관련,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정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 22일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직불금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간 전·현 정부의 책임론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比較不許!

국정감사 종료 이후 직불금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간 전·현 정부의 책임론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www.kwangju.co.kr